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반부패 제도 완성도 높인다”,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24.4.11.)
- ② 헛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24.4.12.)
- ③ “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24.4.17.)
- ④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어떻게?...공공기관·지방의회 3일간 워크숍(24.4.17.)
- ⑤ “韓 윤리경영ESG 위해 뭉쳤다” 국민권익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4.4.16.)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반부패 제도 완성도 높인다” ,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 학계·법조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65명 위촉
- 권익위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자문 통한 반부패 제도 내실화 기대”
- 국민권익위, 200여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대상 감사관회의 개최

(‘24. 4. 1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1일 반부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석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제1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지난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2년간 총 10회의 간담회와 294회의 자문을 통해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 총 65명을 대상으로 위촉하였으며, 지난 1기 자문단에서 활동한 53명의 재위촉 위원들과 12명의 신규 위촉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도 제1기에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부패 법령·제도의 해석·적용에 대응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반부패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내실이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이 서로 오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적극 소통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등 부패방지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라고 강조했다.

헛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국민권익위,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청탁금지법 해석례·판례 등 소개...제도운영 건의 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24. 4. 1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번	권역	일시	장소
1	강원, 인천	4. 12.(금)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	경기	4. 12.(금)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3	전라, 광주, 제주	4. 18.(목) 오전/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4	경상, 부산, 울산, 대구	4. 23.(화) 오전/오후	대구 엑스코
5	충청, 대전, 세종	4. 26.(금) 오전/오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6	서울	5. 2.(목)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

-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관계기관 회의 개최...
법무부 등 8개 기관 참석
-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변화한 행정환경과 공직자 윤리의식에 걸맞은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 논의

(‘24. 4. 17. 국민권익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기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관세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차원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한 행정환경 및 공직자 윤리의식에 부합하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다양한 행위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공공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음주 운전·도박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별도로 규정*한 행위기준에 대한 위반

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 성매매·도박·성희롱 금지, 품위유지, 문서유출금지, 괴롭힘 금지, 성실 납세, 업무전문성, 고객존중, 고객만족, 친절한 민원처리 등

또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들을 직접 만나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갑질행위’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운영사례 및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다양한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행동강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어떻게?... 공공기관·지방의회 3일간 워크숍

- 4월 17일, 4월 24일, 5월 2일, 718개 공공기관 대상
- 올해 전수조사하는 지방의회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 편성

(’24. 4. 1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17일을 시작으로 24일, 5월 2일 총 3차례에 걸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일정 >

일자	대상	장소
4월 17일(수)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4월 24일(수)	지방의회 1차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5월 2일(목)	지방의회 2차	서울 포스트타워

워크숍에서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종합청렴도 평가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한편,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전년도 629개 기관에서 718개 기관으로 크게 확대됐다. 2023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광역 지방의회 위주로 평가했던 것을 전체 지방의회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을 별도로 2일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의 검토과정을 거쳐 5월 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11월까지 평가하여 연말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한다.

국민권익위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많아질수록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라며 “공공기관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반부패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이 활용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韓 윤리경영 · ESG 위해 뭉쳤다” 국민권익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기업의 국제 반부패 규범 ·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법조계 · 학계 의견 청취

(‘24. 4. 16.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미국 · 영국, 세계은행 등의 반부패 제재 강화와 ESG 공시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해, 효과적인 윤리경영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강화된 국제 반부패 규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법 · 제도와 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웹진 발간,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ESG기준원, 법학 · 경영학 교수 등 법조계 · 학계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개발해온 공공기관 · 기업 지원을 위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과 올해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반부패의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각계의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